

법원 “5·18 헬기사격은 사실 … 전두환, 유죄”



“유죄” 선고받고 퇴장하는 전두환

30일 오후 전두환씨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법, “5·18 가장 큰 책임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헬기사격 5월 21일·27일 존재 … 신군부 ‘자위권 발동’ 주장 무너져

“과거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아픈 현대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전두환씨를 향한 재판장의 질타가 이어졌다.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의 헬기 사격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을 인식하고도 (23년 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특별사면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히고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3, 6면〉

재판 시작 전부터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취재진과 5·18 유족들, 일반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선고 내용을 듣고 아쉬운 섞인 표정을 내비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자신의 선고가 진행중인데도, 고개

를 떨구며 조는 모습을 보였던 전씨를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는 방청객도 보였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에게는 재판 전부터 ‘실형’, ‘법정구속’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적지 않았고 검찰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에서도 법정 밖에서 “살인마 전두환을 엄벌하라”는 요구도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로부터 처음으로 2차례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범죄 사실은 ‘故 조비오 신부가 1980년 5월 21일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지칭하면서 그 목적 사실을 허위로 적시했다’는 것으로, 사건의 중요성과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양형에 있어서 부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것이다. 헬기

사격 여부만 쟁점이 됐을 뿐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책임주의 및 양형 원칙에 반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인 5월 21일과 5월 27일의 헬기 사격도 모두 존재한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군이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1980년 5월 헬기에서 발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씨 등 신군부가 즐기게 주장했던 ‘계엄군이 광주 집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위를 진압하던 중 격화돼 부득이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동원했다’는 ‘자위권 발동’ 주장도 깨졌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헬기사격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출간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했다.

전씨는 선고가 끝난 뒤 부인 이씨의 손을 잡고 법정에서 퇴장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에 광주 주요 사업장 ‘멈춤’

삼성전자·위니아·기아차·금호타이어서 잇따라 확진자 발생

광주지역 주요 산업계에서 잇달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장가동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오히려 지역의 수출 성장을 이끌어왔던 사업장들이 연일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입음에 따라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지난 30일 광주시와 지역 주요 경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냉장고동(棟) 전체가 이날 하루 폐쇄되고 조업이 중단됐다. 삼성전자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2일까지 3일간 냉장고 생산라인 제조동 1층과 2층을 폐쇄하는 등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모든 공장에 대해 긴급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방역 당국과 함께 확진자 동선을 중심으로 동료 등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다.

위니아전자 광주공장에서도 지난달 29일 근로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위니아전자는 생산직 직원 등 27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생산직 근로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그와 조기축구 모임과 식사를 함께한 동료 직원 3명이 이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4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기아차 직원의 가족 3명도 이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공장과 2공장 등 주간 조(1조) 근무시간대에 휴업 하는 등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아차와 방역당국은 다만 이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친 사람들을 대

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일단 이날 야간조(2조)부터는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역시 지난 28일 설비수리를 위해 곡성 공장을 방문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데 이어 당시 이들과 접촉했던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직원 1명이 이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 이마트 광주점도 지난 28일 2명에 이어 이날도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광주경제를 이끌어 오던 대표 사업장들이 연이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 경제계도 일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광주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45.3% 증가한 5억7000만 달러, 냉장고는 18.3% 증가한 1억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타이어 수출도 11.2% 늘어난 4800만 달러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 경제계 관계자는 “지역 산업계가 어려움 속에서도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는 등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시점에 확진자들이 연이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확진자가 나온 사업장들이 광주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경제계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법원, 추가 심문 없이 끝마쳐 … 오늘 중 결정할 듯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지만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은 내일 이후로 미뤄졌다.

〈관련기사 4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주미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육형(50·27기) 변호사 그리고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

된다.

한편, 법원은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날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는 이르면 1일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해 윤 총장의 6가지 혐의가 드러났으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검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에는 본안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진석과 함께 책임기 - 오월 ‘동물농장’ ▶16면

굿모닝 여행 - 불만인 송년 공연·영화·책 ▶18·19면

KIA 타이거즈 마무리 훈련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